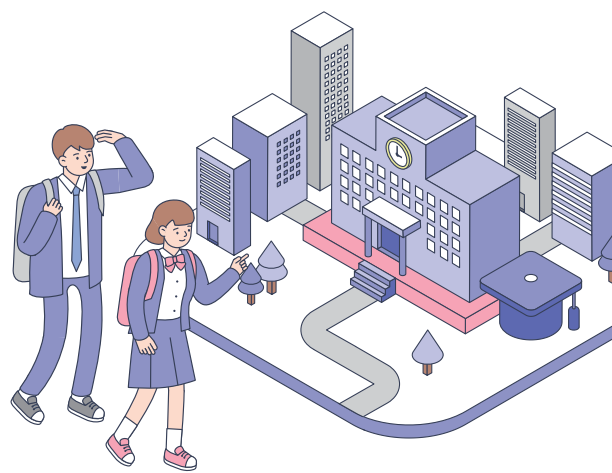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일시 | 2024. 8. 26.(월) / 14:00 ~ 16:00

장소 | 안양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

주최·주관 |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10	10'	개회 안내	성 은 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지원팀장
			축사	김 진 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 종 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 정 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조 성 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주 형 철 경기연구원장
14:10	14:40	30'	주제 발표	백 병 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부장 (교육학 박사)
14:40	15:40	60'	종합토론	좌 장 이 채 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토론1 김 채 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2 김 민 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장
				토론3 김 두 일 한스경제 경기취재본부장
				토론4 김 지 혜 광명 구름산초등학교 담임교사
				토론5 방 시 온 안양시 학교사랑연구회 회장
				토론6 조 숙 경 前 안양 부흥중학교 운영위원장
15:40	16:00	20'	질의답변	방청객 질의 답변

※ 행사내용 및 토론자 등은 의정활동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축 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4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6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8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10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12

주제발표

1. 중학교 배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15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부장 (교육학 박사)	

토 론

좌장_ 이채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1.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5
2. 김민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39
3. 김두일 한스경제 경기취재본부장	43
4. 김지혜 광명 구름산초등학교 담임교사	47
5. 방시온 안양시 학교사랑연구회 회장	51
6. 조숙경 前 안양 부흥중학교 운영위원장	55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중학교 입학 배정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의 정책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이번 뜻깊은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과 경기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 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좌우하는 데서 나아가 이로 인한 학습의 질, 면학 분위기 등 교육환경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특히 경기도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변화 속에 교육여건 또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어 각 환경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 입학 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내 많은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이 주된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계, 지역사회 모두의 개선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중학교 입학 배정 제도 개선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 전문성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중학교 입학 배정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채명 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최 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함께하는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시고, 좌장을 맡아주신 이채명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주제발표를 위해 참가해 주신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부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된 도심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면서 입주민의 증가로 몇몇 학교의 경우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일부 학교에서는 인구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배정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교육당국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상처받고,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당국도 손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문제일수록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빠른 해결책 모색만이 더 큰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열리는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학령인구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학배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교배정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 종 현

김 정 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제안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국민의힘은 도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 정 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위원님과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아이들이거나 공교육과 관련한 분야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이곳에 모인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 가는 학교가 너무 멀다면, 오가는 길이 고역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학업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 싶다면 이런 기본적인 절차부터 세심히 살피고,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 선호도, 통학 거리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도심-구도심 간 학생 분포 양극화까지도 고려해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하는 입학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이 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에 더 미뤄서도, 뚜렷한 효과 없이 무작정 바뀌어도 안 될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즐거운 학교, 행복한 경기 배움터’를 완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학생·학부모가 행복한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채명 의원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부장님 등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먼저,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등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열렸습니다. 소중한 자리 마련해주신 이채명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두고, 먼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페리(C.A.Perry)의 근린주구(Neighbourhood Unit) 개념에 따르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도시계획에서는 초등·중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근린생활권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만큼 물리적인 통학환경은 학생·학부모의 삶의 질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학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저 역시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동권을 위협받던 학생들에게 ‘파프리카’라는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정책을 최초로 실현해 낸 경험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끈 정책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모인 여러분께서도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은 모두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주신 의견들은 가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장 주형철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축하해주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님,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김정호 국민의 힘 대표의원님,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최대호 안양시장님, 박준모 안양시의회의 의장님, 김주석 안양시의회의 부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뜻깊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학교 입학 배정 개편 방향 모색"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학교 입학배정은 단순히 학교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중학교 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별 특성 및 학부모들의 요구, 학교간 편차 최소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배정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육 관계자분들이 모여 깊이 있는 논의와 제안을 통해, 더 나은 배정 방법을 모색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좌장을 맡아주신 이채명 의원님, 주제발표를 해주신 백병부 부장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민관 팀장님, 김두일 본부장님, 김지혜 담임교사님, 방시온 회장님, 조숙경 운영위원장님, 김채만 선임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모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주제발표

중학교 배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협력부장 (교육학 박사)



중학교 배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¹⁾

백병부(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3년간의 중학교 교육은 6년간의 초등교육과 함께 국민의 의무 이면서 권리이다. 그리고 2002학년도 1학년을 시작으로 2004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의 수업료가 폐지되면서 중학교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중학교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기만 하다면 특정 중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할지는 국가와 담당기관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 간 교육여건의 편차가 크지 않고, 거주지에서無理 없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면 학부모의 선택 없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초등학교는 이런 절차로 취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있다. 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지역의 초등학교는 1.5km 이내의 통학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학교 간 교육여건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학교는 초등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중학교의 배정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이다. 이 법에서는 중학구와 학교군을 교육감이 설정하며²⁾,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군 내의 중학교를 복수로 선택하여 추천으로 입학할 학교를 배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학군 및 중학구를 설정하고, 배정의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교육감이 고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정 학교에 입학예정자를 배정하는 실무는 교육장이 담당한다. 그리고 실제 배정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학군 및 중학구 설정에서부터 실제 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교육지원청이 주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구 설정 및 배정원칙과 절차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학교 배정이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시·도 전체 차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1) 이 원고는 발표자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19년에 수행한 정책연구「경기도 중학교 배정 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경기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www.gie.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군은 추천으로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배정하는 지역에서 복수의 중학교로 구성한 학교의 집단을 의미하고, 이들 학교가 포함된 구역을 학군이라고 칭한다. 반면 중학구는 통학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천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입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중학구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중학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중학구 내의 모든 입학예정자들을 입학시켜야 한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교육감과 시·도의회는 특정 지역의 배정원칙이나 절차가 학교 간,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공교육의 가치나 철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황준성 외(2011)는 중학교 설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이양하도록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09년 6월 9차 회의)의 결정이 현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는 하지만 소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민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민원 중 하나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기도교육청 관련 민원을 분류한 결과 교육청 대상 민원 31,330건 중에서 초·중·고 배정 관련 민원이 6,456건으로 20.61%를 차지했다(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 2017). 이 연구에서 수집한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것에서는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연간 1,0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학교 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특정 중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평판이 드러나고,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일부 지역에서는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학교 신설이나 특정 학교 배정을 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학교신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에는 학생수가 급감하여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가 실재하는 경우도 많아 학교신설을 통한 문제해결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유사한 민원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학교 배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고하면서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구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이 통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무작위추첨 대신 통학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배정하거나 학군을 세분화하여 지원 가능한 학교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정 학교의 배정 인원을 증원하거나 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일부 교육지원청은 소위 ‘선호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학군 내 별도 구역으로 편성하여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한다³⁾.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화되는 것이

3) 의무교육단계에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육당국은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소위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학교가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때로는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맥락을 고려하여 이 두 유형의 학교를 ‘’로 묶어 표기하기로 하였다.

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내 인접 중학교 간 신입생 수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학교는 과밀학교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어떤 학교는 과소학교로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계층별로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선택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계층 분리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거주지가 다른 상황은 그 자체로 계층분리를 심화시키는 조건이 되는데, 여기에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면 계층이 비슷한 학생이 같은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김달효, 2016; Betts & Loveless, 2005; Brighthouse, 2000; Gerwitz et al, 1995; Godwin & Kemerer, 2002).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을 인근에 있는 학교 대신 다른 학교에 배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계층 분리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언급하기도 한다.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및 배치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설립비용 분담 구조를 정비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송기창, 2008; 하봉운, 2008).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2017년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학교설립을 위한 비용의 조달이 용이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과 미분양 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교실이 남아도는 사태가 벌어지자 학교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요건이 강화되어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나아가 학교설립 과정에서 교육청의 요구보다는 개발사업자의 이익이 더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개발에 묻힌 학습권’이라는 표현은 이런 현상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경향신문, 2019. 7. 18).

이와 같은 상황은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이슈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중학교 배정은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관련된 민원이나 불만 또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은 배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만으로 배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교육지원청이 지역별 특성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배정 실무를 진행할 필요도 있지만,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학교 간 편차를 최소화하여 지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배정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몇 년 사이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등 중학교 배정의 기본적인 조건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배정의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경기도의 중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 다음,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은 어떤 양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중학교 배정의 원칙과 관련된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는 어떠한지를 정리하여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교육격차와 같이 공교육

이 직면한 과제의 맥락에서 보다 바람직한 중학교 배정 방식의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시·도교육청 중학교 배정 원칙과 절차⁴⁾

전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3항과 4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학교구’를 고시하고 있다. 2024학년도 중학교 추천 배정을 위해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부청사가 관할하는 21개 교육지원청 내의 중학교는 481교(남중 18교, 여중 20교, 공학 443교)로 이 학교들이 77개 학교군과 79개 중학구로 편제되어 있다.

〈표 1〉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

지역		학교군					중 학 구					합계					
		학 교 군	중학교 현황				중 학 구	중학교 현황				학 교 군	중학 구	중학교 현황			
			남 중	여 중	공 학	소 계		남 중	여 중	공 학	소 계			남 중	여 중	공 학	소 계
남부청사 관할	수원	6	2	2	49	53	2			2	2	6	2	2	2	51	55
	성남	4	3	3	39	45						4		3	3	39	45
	안양	2	1	2	21	24						2		1	2	21	24
	과천	1			3	3						1				3	3
	부천	5	1	3	29	33						5		1	3	29	33
	광명	3			12	12						3				12	12
	안산	5			26	26	4			4	4	5	4			30	30
	평택	4	3	2	17	22	7			7	7	4	7	3	2	24	29
	군포	1			12	12						1				12	12
	의왕	2			6	6	1			1	1	2	1			7	7
	여주	1	1	1	1	3	9	1	1	8	10	1	9	2	2	9	13
	화성	10			36	36	7	1	1	6	8	10	7	1	1	42	44
	오산	4			9	9						4				9	9
	광주	1	1	1	5	7	5			5	5	1	5	1	1	10	12
	하남	3			12	12	1			1	1	3	1			13	13
	양평	1			2	2	10			10	10	1	10			12	12
	이천	2		1	6	7	8			8	8	2	8		1	14	15
	용인	10	1		41	42	8			8	8	10	8	1		49	50
	안성	2	2	2	3	7	5			5	5	2	5	2	2	8	12
	김포	6	1	1	20	22	3			3	3	6	3	1	1	23	25
	시흥	4			17	17	9			9	9	4	9			26	26
소계		77	16	18	366	400	79	2	2	77	81	77	79	18	20	443	481
북부청	의정부	1	2	2	16	20						1		2	2	16	20
	동두	1	1	1	4	6						1		1	1	4	6

4)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9월 경에 중학교 추천배정을 위한 학교군 및 학교구를 고시하고 있다. 2025학년도 배정을 위한 고시는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지역		학교군					중 학 구					합계					
		학 교 군	중학교 현황				중 학 구	중학교 현황				학 교 군	중학 구	중학교 현황			
			남 중	여 중	공 학	소 계		남 중	여 중	공 학	소 계			남 중	여 중	공 학	소 계
사 관 할	천 양주	3			9	9	3			3	3	3	3			12	12
	고양	10			29	29	15			15	15	10	15			44	44
	구리	1	1	1	5	7	1			1	1	1	1	1	1	6	8
	남양 주	10			29	29	8			8	8	10	8			37	37
	파주	6			20	20	8	1	1	7	9	6	8	1	1	27	29
	연천						6			6	6		6			6	6
	포천	1			4	4	9	1	1	8	10	1	9	1	1	12	14
	가평						5			5	5		5			5	5
소계		33	4	4	116	124	55	2	2	53	57	33	55	6	6	169	181

합계	110	20	22	482	524	134	4	4	130	138	110	134	24	26	612	662
----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학교수나 학군수, 학군에 포함되어 있는 중학교의 수가 매우 다양하다. 일례로 수원의 경우는 관내 55개 중학교를 6개 학교군과 2개의 중학구로 편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군별로 중학교수의 편차는 매우 커서 북부중학군의 경우는 20개의 중학교가 포함되어 있지만, 광교중학군과 호매실중학군은 각각 5개와 4개의 중학교만 포함되어 있다. 성남의 경우는 45개의 중학교를 4개의 학군으로 편제하였는데, 분당중학군은 19개의 중학교가 포함된 반면 위례중학군은 2개의 학교만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 내 중학교 수뿐만 아니라 학군별 중학교 수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학교수에 비해 학군수가 적을 경우 원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원과 용인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 수는 비슷하지만 학교군은 용인이 더 많다. 이것은 용인에 비해 수원의 중학교 간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용인에 비해 수원의 초등학생들이 원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에서는 2012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전우천 외, 2012)을 근거로 북부중학군과 남부중학군, 영통중학군을 각각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성남의 경우도 학군이 네 개밖에 안되지만, 학교별로 결정한 1근거리 학교를 1지망으로 지원하게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이나 화성·오산과 같은 교육지원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군 내에서 선택한 학교를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작위추첨이 아니라 전입일이나 중학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전입일이나 거리를 고려하여 추첨에

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지역에서도 모든 학군에서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의 학군을 몇 개의 구역으로 세분한 다음 특정 구역에서만 전입일을 고려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지역별 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할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작위 추첨배정을 할 경우 원거리 통학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다른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배정의 원칙을 정할 수도 있다.

3.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 실태 및 요구 분석

이번 절에서는 2019년 연구를 수행하면서 진행했던 학교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와 FGI,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 실태 및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정리하였다.

가.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 실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것을 정리한 결과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총 23,779건이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해마다 1,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들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에 따르면 이들 민원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이 지원청 관할 지역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학교 중심의 현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접수된 민원 중에서는 소위 ‘비선호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원거리학교 배정 관련 민원도 상당했지만, 이 중에는 배정된 학교가 원거리여서가 아니라 소위 '비선호학교'이기 때문에 제기된 것도 상당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배정의 원칙과 절차를 수정할 경우 특정학교 기피 혹은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FGI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은 원거리학교 배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중의 일부는 학군 조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1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의 94.3%가 통학시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2지망 이하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는 그 비율이 52.6%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2지망 이하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의 상당수가 배정 이후에도 학교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원거리의 개념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의한 것일 때가 많다고 보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원거리 통학을 이유로 제기된 민원이지만 그 이면에는 배정받은 학교가 소위 '비선호학교'이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한편 면담에 참여한 업무담당자들은 특정 학교가 '비선호학교'가 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이 중에는 통학로나 학교 주변 여건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학교의 전통이나 명성, 막연한 소문,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심리 등과 같이 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 주변에 소위 ‘비선호중학교’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은 초등 학부모에게서 43.6%, 초등 교원에게서 53.6%, 중학교 교원에게서 47.4%에 달했다. 특정한 학교가 '비선호학교'로 알려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초등 학부모는 나쁜 학교라는 소문과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거나 공부를 안 시키는 학교여서 그렇다는 데 동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비선호학교’가 근거가 명확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소문과 이미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학교가 공부를 안 시킬 것이라는 소문과 불안감 때문에 이와 같은 소문과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전술한 결과는 소위 ‘비선호중학교’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이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교원과 학부모의 절반 정도는 지역에 비선호중학교와 관련된 소문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위 ‘비선호중학교’에 민감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배정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다수 학부모들의 이익과는 무관하거나 때로는 다수 학부모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업무 담당자들은 배정 과정에서 학교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상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학교 신설 및 증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학교 간 균형을 고려해서 배정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학부모들의 요구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면담 참가자들은 학군 조정 및 학생 배정 과정에서 교원 운영의 경직성 등이 큰 사립학교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었다.

나. 중학교 선택 기준 및 통학가능거리에 대한 인식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문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통학시간이 가장 높게 지목되었다. 통학시간을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은 초등 학부모 60.0%, 중 1학부모와 학생 각각 68.8%,

63.7%에 달했다. 통학거리에 이어 우선순위로 지목된 것은 학교시설과 주변환경이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시설과 주변환경에 이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중학교 선택의 기준으로 지목한 반면 중1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학교선택 동기는 자녀의 학교 성적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 성적이 높은 편에 속하는 학부모들은 다른 집단보다 통학시간은 덜 중시하는 대신 공부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더 고려하고 있었지만, 자녀의 학교 성적이 낮은 학부모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통학거리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적에 따라 중학교 선택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택 동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경우 성적에 따른 학교 간 학생 구성의 차이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군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통학 가능거리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도보를 기준으로 초등 학부모들은 10분 이내가 52.1%, 20분 이내가 39.7%인 반면 중학교 학부모들은 10분 이내가 37.9%, 20분 이내가 50.2%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학부모들에 비해 중학교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먼 거리를 통학이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 중학교 교원에게서도 20분 이내라는 응답이 각각 57.1%와 54.0%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기준으로 한 최대 통학 가능거리에 대한 인식은 중학교 학부모에게서는 도보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 학부모들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경우 10분 이내가 48.2%, 20분 이내가 37.0%인 반면 중학교 학부모들에게서는 10분 이내가 48.0%, 20분 이내가 38.3%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보에 비해서 돌발 변수가 많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가 주된 통학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예상 시간을 보다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 중학교 배정 원칙 및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면담에 참여한 업무 담당자들은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지망 배정률을 높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 강화, 학군 세분화 및 배정 기준 다양화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이 외에도 면담에 참여한 업무 담당자들은 유형별 배정 방법과 절차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위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규모 적정화를 위한 노력, 학급당 인원 편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재량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배정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초, 중 학부모 및 교원 모두 선택할 수 있는 학교수는 적어지더라도 학군을 좁혀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을 지지한 비율은 초등학교 학부모의 73.8%, 중학교 학부모의 74.2%, 초등학교 교원의 64.4%, 중학교 교원의 62.8%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교원들이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선택권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자녀의 학교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군 광역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집단이 보다 적극적인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소위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군 내에서 같은 학교를 선택한 학생을 거리순으로 배정하는 것(근거리 배정)이 좋은지 아니면 무작위로 추첨 배정하는 것(추첨 배정)이 좋은지를 설문한 결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79.4%, 중학교 학부모의 81.5%, 초등학교 교원의 61.5%, 중학교 교원의 61.9%가 근거리 배정을 지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교원 모두 동일 학교 내에서도 통학거리와 시간의 편차가 실재하는 상황에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는 학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학부모에 비해 교원에게서는 추첨 배정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일 학군 내에서 근거리를 계산하는 데 따른 행정력과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민원 등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정 시 전입일을 고려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와 교원 모두에게서 중학교까지의 거리가 같은 경우만 전입일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전입일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순이나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전입일을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 집단에서 20%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일부 학군에서 전입일을 고려하여 학생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데 일정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전입일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나 추첨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상당수의 학부모와 교원이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차이가 커지더라도 학부모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해야 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학부모에게서는 전자를 지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원에게서는 후자를 지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성적이 상에 속하는 학부모에게서는 전자를 지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 교원에게서는 후자를 지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학부모들의 응답과는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즉 학부모들은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먼

학교에 선택하지는 않지만, '비선호학교'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의 배정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부모들이 교육 소비자로서의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중학교 배정 원칙과 방향

가. 원칙

1) 통학권 보장: 거리 3km, 도보 45분 정도

중학교 배정의 첫 번째 원칙은 통학이 가능한 범위 내의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화룡·동재욱(2011)은 여러 문헌과 법률, 해외 사례 및 실제 통학거리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시지역 중학교의 경우는 거리로는 3.0km 이내, 버스로는 15분 이내를 통학거리로 설정하였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1에서 통학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학교설립 등의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기준으로 학교급별 통학범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고등학교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이화룡·동재욱(2011) 안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먼 거리를 통학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1을 근거로 학군을 설정하고, 각각의 중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교원과 학부모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초등학교 학부모의 91.1%, 중학교 학부모의 88.1%는 중학생의 통학거리가 도보로 20분 이내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초, 중학교 교원 또한 중학생의 통학거리가 도보로 20분 이내여야 한다는 응답이 77.9%와 73.2%에 달했다.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기준으로 한 최대 통학 가능거리에 대한 인식은 중학교 학부모에게서는 도보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 학부모들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경우 10분 이내가 48.2%, 20분 이내가 37.0%인 반면 중학교 학부모들에게서는 10분 이내가 48.0%, 20분 이내가 38.3%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보에 비해서 돌발 변수가 많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가 주된 통학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예상 시간을 보다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화룡·동재욱(2011)이 버스로 15분을 중학생의 통학거리로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20분 이내여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나 이화룡·동재욱(2011)의 제안 등을 반영하되,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학거리 내에 있는 학교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를 활용하여 통학거리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규칙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이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은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되, 통학거리를 1.5k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통학거리에 대한 규정 없이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비례하여 중학교의 통학거리를 산정하면 2.25km 이내가 된다.

다만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이 기준으로 중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화룡·동재욱(2011)이 제안한 3km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시간은 도보 45분(시속 4km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표 2〉 적정 통학거리(안)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비고
도시지역	거리	1.5km	3km	시속 4km 기준
	시간	도보 30분	도보 40분	
농산어촌지역	거리	6.0km	8.0km	시속 50km 기준
	시간	버스 15분	버스 20분	

2) 학교 간 학급 및 학생수의 균형 확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학교 배정은 소위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학교 규모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반되는 문제는 두 학교 모두를 힘들게 한다. 규모가 큰 학교는 과밀, 과대학교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렵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한 반면 규모가 작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학교 배정의 원칙은 학교 간 학급 및 학생수의 균형이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어느 수준을 균형점이라고 볼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적정규모학교 기준이다. 교육부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학교로 18~36학급에 450명~1,260명의 학생, 학급당 학생수는 25~35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기준이 갖는 비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학교통폐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수행한 면담에 따르면 학년당 3학급 이하의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통폐합을 전제하지 않는 도시 소재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상, 학년당 최소 4학급

이상이 되도록 배정 인원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은 경기도교육청의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서 학급당 학생수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유형의 하나로 제시한 '전체 학급수가 적은 학교'보다 한 학급이 많은 것이다. 이 지침에서는 전체 학급이 9학급 이하인 학교는 전체 학급수가 적은 학교로서 학급당 학생수를 학군 내 다른 학교보다 2명 더 적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학생구성의 다양성 확보

여러 연구자들은 미래사회의 주요 역량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거나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의 학생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질집단과 접촉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Banks, 2002). 나아가 학교의 학생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여러 연구자들은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일상화된 불확실성과 불평등의 심화를 들고 있다. 계층 분리 현상이 심화되어 집단 간 교류와 이해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힘든 갈등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중학교 배정 방식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일례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거나 소위 '선호학교'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대치는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학교까지의 거리나 전입일 등을 기준으로 선배정하는 방식도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 동기는 계층별로 상이한데다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거주지 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중학교 배정의 마지막 원칙은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학교 배정은 개발계획을 비롯해서 수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되는 배정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은 중학교 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일부 지역은 학령인구가

급증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은 학교의 신증설로 배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학교 배정의 기준과 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한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례로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군 내의 구역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학군의 변경은 최소화하면서도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배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두 개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의 선택 없이 특정 학교에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대권 외(2017)가 지적한 것처럼 현행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

나. 방향

전술한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중학교 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방안' 혹은 '절차' 대신 '방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지역별 맥락과 이를 반영한 현재의 배정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배정 방안이나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의 배정 방식이 결정된 지역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되, 여기에서 제안하는 방향에 맞게 현재의 배정 원칙과 절차를 검토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배정의 기준과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 근거리 학교 배정이 가능하도록 학군 혹은 학군 내 구역 세분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학생의 통학거리는 도보 45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각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의 학군 설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를 학군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설정한 학군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곳도 있을 것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 학군을 도보 45분 이내로 재설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배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학군 내에 소위 '비선호학교'가 있거나 입학자원의 변동이 큰 도시의 경우는 도보 기준 30분 이내에 있는 복수의 중학교를 학군 내의 구역으로 편제하여 구역별 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보 30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에서 초등학교의 통학권으로 설정한 기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부 학군에서 구역을 세분화하고 구역 내에서 학생을 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중학교 배정 관련 연구들에서도 학군을 세분화하는 것이 통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배정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효정, 2007; 이화룡 외, 2011).

여기에 더해 소위 '비선호학교'와 '선호학교'가 같은 구역 내로 편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호학교' A와 '비선호학교' B를 같은 구역 내 학교로 편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학교 간 균형 배정과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구분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은 관내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연도별 1지망 희망학생수, '비선호학교'로 지목된 학교 교원들의 평가와 동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2)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작위 추첨 배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학군별 배정의 경우 입학지원자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면 교육장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교육지원청에서는 근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및 배정이 가능한 학교를 단수로 지정하여 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경우도 있고, 추첨 이전에 전입일이나 학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배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런 원칙을 적용한 지역에서는 이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거리나 전입일 등의 기준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기도 하고, 거주지 분화에 따른 계층 분리 현상이 심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대한 경합이 치열한 곳으로서 기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특정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는 곳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나아가 소위 '선호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요구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배제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박대권 외(2017)는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아 소지역표에 의한 강제배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중학교 배정방법이 추첨에 의한 배정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수 증감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나 이사 등과 관련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식은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분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술한 맥락에서 중학교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입학지원자가 복수의 학교를 선택한 후, 정원이 초과된 학교의 경우는 근거리나 전입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첨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도 이미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이 원칙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통학거리 도보 30분 이내 학교를 학군 내 구역으로 편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구역 내 어떤 학교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보장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군 내 학교수가 적거나 학교의 분포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거주지에서 도보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추첨배정에 의해 40분 정도 걸리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통학거리를 고려한 순위별 배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규모가 작은 학교 지원 및 학교 다양화

진학 희망자가 적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 데 성과를 거둔 학교도 있다.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의 전문직 경험이 있는 교원을 교장·교감으로 배치하거나 학교혁신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교원을 배치할 필요도 있다. 전자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후자는 학교문화나 프로그램의 혁신을 통해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소규모학교를 학교다양화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진학 희망자가 적은 소규모학교를 도심형 대안학교로 육성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화룡

외(2011) 등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사립학교의 택지개발지로의 이전 재배치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은 결국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연동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폐교나 통폐합예상학교 등을 포함해서 당해 지역의 학교 자원 전체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2017). 국민신문고로 본 경기교육민원, 어떤 것이 있나?.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 2017(3), 1-4.

경향신문(2019. 7. 18). <개발에 묻힌 학습권> 부동산 업황 따라 학생 수 들락날락.

김달호(2016). 공교육의 도전: 학교선택제. 문음사.

박대권·김경민·이창하(2017).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교육정책연구소.

박효정(2007). 중학교 배정에 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송기창(2008).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45-68.

이화룡·동재욱(2011). 개발지내 학교 적정배치를 위한 학생 통학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7(6), 77-84.

전우천·조기숙·김기천(2012). 중학교 입학배정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하봉운(2008).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비용 부담 방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측면에서.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319-350.

황준성·고전·김성기·하봉운(2011).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8(3), 171-194.

Banks, J. A.(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3rd ed). Boston : Allyn & Bacon.

Betts, J. R., & Loveless, T.(2005). Getting choice right: Ensuring equity and efficiency in education polic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Brighouse, H.(2000). School choice and social justic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ewirtz, S., Ball, S. J., & Bowe, R.(1995). Markets, choice and equity in education. Buckingham;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Godwin, R. K., & Kemerer, F. R.(2002). School choice tradeoffs: liberty, equity, and diversity.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토론 1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학교 입학배정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경기연구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교통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이용 수단별로 다룬다면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용 목적별로 나누면 통학, 통근, 쇼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및 시군의 통학버스에 대해서 몇 번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억지로 교육과 연관성을 찾는다면 3명의 아이를 키운 부모입장과 통학버스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내용

문제 인식은 경기도 중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가 길다. 따라서 중학교 배정 방법의 변경을 통해 원거리 통학을 줄여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통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현재의 중학생 배정 방법은 학생이 학교군과 중학구 내의 중학교를 지망하고 교육청에서 지망 순위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중학교 배정 방식의 쟁점을 하나로 정리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축소할 것인가?”이다.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학교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축소하려면 학교는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학교의 동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시설, 교육 서비스, 학교의 지리적 환경 등이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동질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해결책은 중학교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학교 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중학교의 동질성 확보는 오래된 학교의 리모델링 기준 마련, 선생님의 배치 기준(교육 성과별 적정한 비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제자가 제시하신 배정 방법의 개선 방안인 4가지 원칙(통학권 보장, 학교간 학급 및 학생수의 균형 확보, 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과 3가지 방향(학군 및 학군 내 구역 세분화, 무작위 추첨, 규모가 작은 학교 지원 및 학교 다양화)에 모두 동의합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나열식 개선안으로는 구체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통학권을 보장하는 추첨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학권은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20

분 이내 통학권을 보장한다. 통학권 보장되는 학교가 1개인 경우는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학군내 구역 세분화를 통해서 구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마치며

교육과 교통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가 적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돌연변이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듯이 비전문가의 생각이 교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 2

중학교 배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김민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토론 3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와
‘강남8학군’으로 나타나는 교육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김두일 한스경제 경기취재본부장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와 ‘강남8학군’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당연한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먼 과거 맹자의 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 번씩이나 했다는 구설은 이러한 부모의 바람이 얼마나 강렬한 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제이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다. 특히 모래뽕 지형을 메꿔 개발된 강남 지역에 강북의 우수한 학교를 옮기면서 시작된 강남8학군은 개발이 완료된 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전자가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담고 있다면 후자는 국가의 정책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 조성이 미치는 영향이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및 인재양성에 지대하게 미쳤다는 부분이 일견 다른 점으로 비춰진다.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학부모는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과 우수한 교육환경이 주라면 자녀들은 근거리 통학 및 학창시설을 함께 보내는 또래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 하에 학부모와 자녀가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역시 근거리 통학이라는 점은 두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이 뒷받침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수 있지만 이렇다하더라도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도 교육계의 현실로 나타난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던 맹자의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녀의 교육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진다.

행정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중대한 부분임은 이견이 없다. 어느 자녀라고 천하고 어느 자녀라고 귀하단 말인가라는 게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공동적인 생각이면서 그래도 내 자녀 만큼은 이라는 것 또한 속내인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기장의 심판처럼 학군 조정과 배정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이번 토론을 통해 미력하나마 작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토론 4

중학교 배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김지혜 광명 구름산초등학교 담임교사



토론 5

중학교 배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방시온 안양시 학교사랑연구회 회장



학생, 학부모의 바램이 최대한 반영되는 중학교 배정되길 ...

안양시 중학교 학교군은 크게 만안중학군(9개), 동안중학군으로 나뉜다.
동안중학군은 다시 동A구역(4개), 동B구역(2개), 평촌구역(9개) 3구역으로 다시 나뉜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군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특정 중학교의 입학 정원이 1지망 인원보다 많으면 만안 중학군, 동안 중학군(동A구역,동B구역)은 컴퓨터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그러나 동안 중학군 평촌구역의 경우 1지망만 선택 후 초등학교 전·입학 순 그리고 거주지 주소에 따라 컴퓨터 추첨으로 중학교 배정을 하고 있다.

안양시의 중학군과 구역은 변수가 많다.
따라서 초등학교마다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이 진학할 혹은 재학중인 초등학교에서 진학 가능한 중학교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중학교 배정은 학교 선호도와 통학 거리에 의해 많이 좌우되므로 학생 분포의 양극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희망학교 배정 방식의 문제점과 지역 학군을 세밀하게 조절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비선호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바램이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입학 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계기 되기를 희망 한다.

토론 6

중학교 배정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조숙경 前 안양 부흥중학교 운영위원장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